

1 1930년대 굴릭(Gulick)이 제시한 기본행정이론에 시대적 요구에 따라 1970년대 폴란드(Poland)가 추가시킨 이론 분야는?

- ① 기획(Planning) ② 조직(Organizing) ③ 평가(Evaluating) ④ 인사(Staffing)

해설

- 1937년 굴릭(L. Gulick)은 '행정과학논총(Papers on the Science of Administration)'에서 최고관리층의 7대 기능으로 POSDCoRB[기획(Planning), 조직화(Organizing), 인사(Staffing), 지휘(Directing), 조정(Coordinating), 보고(Reporting), 예산(Budgeting)]를 주장.
- 1971년 폴란드(O. F. Poland)는 "Why Does Public Administration Ignored Evaluation?"에서 E(Evaluation)를 추가하여 POSDECoRB를 제시.

답 ③

2 다음 중에서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① 행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한다.
② 행정업무의 종류와 시대에 따라 변한다.
③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띤다.
④ 행정 수행에 필요한 지도원리나 지침의 역할을 수행한다.

해설

① (×) **행정목표** : 행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
행정이념 : 행정체계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행정과 그를 위한 지침이 되는 기준(행정가치). 행정이 지향하는 방향·이상·최고가치·규범, 지도정신,
② (○) 시대와 장소, 행정업무의 종류에 따라 강조되는 행정이념이 다르며, 상호보완적·상대적 특성을 갖는다.
③④ (○) 행정이념의 기능 : 행정의 방향과 지침 제시, 행정활동에 대한 평가기준, 행정목표의 설정 및 달성에 기여, 행정의 존재가치 부여.

답 ①

3 사무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무관리란 사무실에서의 작업을 능률화·경제화하기 위한 관리활동이다.
② 조직 구성원 간의 불화나 비협조가 사무의 작업능률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③ 적절하지 못한 인사관리는 정신능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④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균형 능률의 극대화를 위해 바람직하다.

해설

② (×) 조직 구성원 간의 불화나 비협조는 사무의 **정신능률화를 저해하는 요인**.
* 전자정부, 유비쿼터스정부를 논하는 현시점에는 부적절한 문제이다. 아래 내용은 참조만 할 것.

■ **사무관리의 개념**
정보처리활동을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관리활동. **사무작업의 능률화**와 **사무비용의 경제화**를 위한 각종 관리활동.

사무작업 능률화	작업능률	• 노동을 할 때 인간이 소비한 에너지량과 노동의 결과로 생긴 생산물량 또는 작업량의 비(比)로서 나타내는 노동효율. 육체적 작업이 주가 되는 능률로서, 될 수 있으면 힘을 덜 들이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작업능률화를 위한 고려사항 : ① 작업의 용이화, 작업과정의 간소화·표준화, ② 동작의 경제화, ③ 사무적인 이동거리(흐름)의 최소화, ④ 사무의 자동화·기계화, ⑤ 각종 사무집기의 인체공학적 설계
	정신능률	• 사무작업에 있어서 정신적인 요소의 최적화. 정신적인 긴장상태를 최소화하여 stress를 줄임. • 정신능률 저해요인 : ① 위험성이 수반되는 작업방법, ② 많은 동작이 연속되는 작업과정, ③ 적절하지 못한 인사관리 , ④ 조직구성원간의 불화·비협조
	균형능률	•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이 적절하게 조화된 상태 • 균형능률 극대화를 위한 고려사항 : ① 적재적소에 배치 , ② 능력에 적합한 사무분담, ③ 피로, 과로요인의 제거, ④ 공정한 사무관리
사무비용 경제화	• 사무처리에 경제원칙을 도입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관리. 사무제품을 생산하는 재료비만이 아니고 사무처리방법 등 제도적인 요소와 사무원에 관한 인적 요소, 사무시설과 환경 등 물리적인 요소가 있음 • 사무비용 경제화 방안 ① 비용절감 : 소모품비, 인건비 및 사무기기와 같은 비품비 등 직접적인 비용의 절감 ② 낭비제거 : 정당한 이유 없이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현상을 줄임. 타성에 의하여 비판 없이 선례를 답습하는 태도를 없애고, 사무를 표준화·전문화 및 자동화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관리층에 있는 사람들이 진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	

답 ②

4 조직에 적용되는 관리의 행동과정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조직화 → 동기화 → 계획화 → 조정화 → 통제화
- ② 동기화 → 계획화 → 조정화 → 조직화 → 통제화
- ③ 계획화 → 조정화 → 동기화 → 조직화 → 통제화
- ④ 계획화 → 조직화 → 동기화 → 조정화 → 통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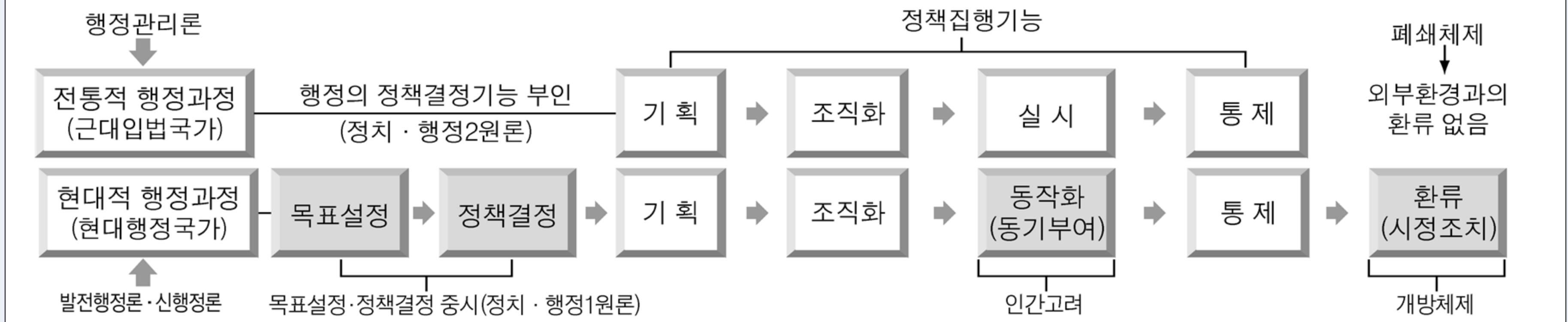
해설

경영학 문제가 출제됨.

■ **페이올(H. Fayol) 관리자의 5가지 기능(관리과정의 단계) : 계획 → 조직화 → 지휘(동기부여·리더십·감독) → 조정 → 통제**

- ㉠ **계획(Planning)**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래에 수행할 일을 계획하여 사전에 결정. 목적 설정, 문제 예측, 수행 절차 확립 등
- ㉡ **조직화(Organizing)** : 수립된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투입하는 일. 직무가 능률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적재적소 배치, 물적 요소의 명확화, 그리고 이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직무가 능률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활동.
- ㉢ **지휘(commanding)** : 조직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일을 수행하게 만드는 것. 사람들의 열정을 끌어내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도록 사람들을 고무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동기부여와 리더십과 같은 과정이 포함되며** 지휘를 통해 경영자는 인적자원의 행동을 목표에 맞추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촉구하고 최선의 작업을 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
- ㉤ **조정(Coordinating)** : 작업 실시의 시기와 순서의 관점에서 그 조직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이해나 견해를 마찰 없이 결합하고 조화시키는 기능
- ㉥ **통제(Controlling)** : 업무가 특정한 지시 및 규제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감독. 목표와 성과를 비교하고 그 차이를 수정.

■ 참고 : 전통적 행정과정과 현대적 행정과정



답 ④

5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공재의 존재에 대한 정부 보조금
- ② 외부효과의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공적(公的) 공급
- ③ 자연독점에 대한 정부 규제
- ④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직접적인 공적(公的) 공급

해설

- ① (×) 공공재의 경우 정부의 공적 공급
- ② (×) 외부경제효과의 경우 공적 유도, 외부비경제효과의 경우 정부규제
- ③ (○) 자연독점의 경우 공적 공급 또는 정부규제
- ④ (×) 정보의 비대칭성의 경우 공적 유도 또는 정부규제

■ 시장실패 원인별 대응방식

구 분	공적 공급(조직)	공적 유도(유인, 보조금)	정부규제(권위)
불완전경쟁(독과점)			○
자연독점(요금제)	○		○
정보의 비대칭성		○	○
외부효과의 발생		○(외부경제일 때)	○(외부비경제일 때)
공공재의 존재	○		

답 ③

관련기출

1. 시장실패 원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서울9급

- ① 외부효과 발생에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정부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
- ② 자연독점에 대해서는 공적공급 혹은 정부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
- ③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대응할 수 있다.
- ④ 불완전경쟁에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공적공급으로 대응할 수 있다.

2.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0 국가7급

- ①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② 공공재의 존재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는 공적 공급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
- ③ 자연독점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는 공적 유도(보조금)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
- ④ 파생적 외부효과로 인한 정부실패는 정부 보조 삭감 또는 규제 완화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

3. 시장실패와 그에 대한 대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 경찰간부
①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공공재로 인해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공급이 필요하다. ② 외부불경제의 경우 정부개입이 없으면 과소공급되므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공적 유도가 필요하다. ③ 정보의 비대칭성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유도나 정부규제가 필요하다. ④ 규모의 경제가 적용될 때 자연독점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공급이나 정부규제가 필요하다.	
4. 시장실패(market failur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 경찰승진
① 시장에서 외부경제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정부 개입이 없으면 과소 공급되므로 정부는 부담금을 부과해 비용부담자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한다. ②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산업에서 자연적인 독점현상이 발생 하는 경우 정부는 직접 경영하거나 가격규제를 통해 개입한다. ③ 완전경쟁시장이 독과점 체제로 변모할 경우 정부는 시장의 교란 활동에 대해 정부규제를 통해 개입한다. ④ 시장실패는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5. 시장실패의 원인과 그 대응방식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2019.12 군무원
① 공공재의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 문제는 정부가 조세를 재원으로 공공재를 직접 공급하여 해결할 수 있다. ②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독점에 대해서는 공기업을 통한 직접공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③ 자연자원의 과다사용에 따른 고갈 등 공유지의 비극문제는 소유권의 설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④ X-비효율성이 발생할 경우 민영화나 규제완화로 해결할 수 있다.	
6. 시장실패에 대한 원인별 정부의 대응방식이 잘못 연결된 것은?	2019 경찰간부
① 자연적 독점－공적유도·공적규제 ② 정보의 비대칭성－공적유도·공적규제 ③ 외부효과 발생－공적유도·공적규제 ④ 불완전 경쟁－공적규제	
7. 시장실패 원인별 정부의 대응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해경간부
① 외부효과의 발생－정부규제 ② 공공재의 존재－공적 공급 ③ 정보의 비대칭성－공적 공급 ④ 자연독점－정부규제	

답 1. ④ 2. ③ 3. ② 4. ① 5. ④ 6. ① 7. ③

6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합리모형은 신제도주의에서 설명한 합리적 선택모형과 맥을 같이 한다.
- ② 합리모형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효용극대화의 논리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경제인의 가정과 매우 유사하다.
- ③ 점증모형은 실제의 결정상황에 기초한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모형이다.
- ④ 점증모형의 장점을 합리모형과의 통합으로 보완하려는 시도가 최적모형에서 나타난다.

해설

- ④ (×) 최적모형이나 혼합모형은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을 절충 또는 통합하는 모형이다.
- **Etzioni의 혼합모형(mixed-scanning model)** : 혼합모형은 점증모형의 단점을 합리모형과의 통합으로 보완하려는 시도이다. 혼합모형은 개인적 수준의 의사결정을 대상으로 하되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변증법적 통합 형태를 띠며, 각 모형의 장점을 취한 정책 결정 모형에 해당한다. 즉 Etzioni는 합리모형을 기반으로 한 정책 결정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였으며, 점증모형에 기반한 결정의 경우 근시안적 결정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반혁신적인 정책 결정을 정당화 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를 비판하고 각 모형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정책 결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 **Y. Dror의 최적모형** : Y. Dror는 보다 나은 정책결정을 위한 전략과 정책결정체제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합리모형의 비현실성과 점증모형의 보수성을 비판하고, 양자를 통합하여 이상주의(합리모형)와 현실주의(점증모형)를 결합시켜 최적모형을 제시. 최적모형은 기존정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점증주의 성향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정책방향도 다시 검토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조정정책결정), 합리모형에 대해서도 정형적인 결정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선례가 없는 비정형적인 결정의 경우 직관의 활용, 가치판단, 창의적 사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초합리적 아이디어까지 고려할 것을 주장(초합리성)하는 결정모형이다.

답 ④

관련기출

1.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회8급
① 사이먼(Simon)은 결정자의 인지능력의 한계, 결정상황의 불확실성 및 시간의 제약 때문에 결정은 제한적 합리성의 조건하에 이루어 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② 점증모형은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합리모형과는 대조적으로 실제의 결정상황에 기초한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모형이다. ③ 혼합모형은 점증모형의 단점을 합리모형과의 통합으로 보완하려는 시도이다. ④ 쓰레기통모형이 가정하는 결정상황은 불확실성과 혼란이 심한 상태로 정상적인 권위구조와 결정규칙이 작동하지 않는다. ⑤ 합리모형에서 말하는 합리성은 정치적 합리성을 의미한다.	
2.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 국회9급
① 합리모형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효용극대화의 논리에 따라 소비행동을 하는 경제인의 가정과 매우 유사하다. ② 점증모형은 합리모형과 대조적으로 실제의 결정 상황에 기초한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모형이다. ③ 점증모형의 단점을 합리모형과의 통합으로 보완하려는 시도가 혼합모형에서 나타난다. ④ 쓰레기통모형은 기존의 합리적 사고에 근거하지 않는다. ⑤ 최적모형은 기존의 정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점증주의 성향에서 출발한다.	

답 1. ⑥ 2. ⑥

7 세일러와 선스타인(Thaler & Sunstein)이 제시한 넛지이론(Nudge Theory)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행동경제학에서는 휴리스틱과 행동 편향에 따른 영향이 개인의 의사결정과 선택에 영향을 미쳐 자신의 후생 손실을 초래하는 외부효과가 행동적 시장실패의 핵심 요소라고 본다.
- ② 넛지란,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경제적 유인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선택 설계의 제반 요소를 의미한다.
- ③ 전통경제학에서는 명령지시적 정부규제나 경제적 유인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지만, 넛지는 기본적으로 간접적이고 유도적인 방식의 정부 개입방식으로서 촉매적 정책수단의 성격을 띠고 있다.
- ④ 넛지는 엄격하게 검증된 증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을 강조한다.

해설

- ① (×) 외부효과는 자신의 행동이 의도하지 않게 타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결정과 선택이 자신의 후생손실을 초래하는 행동적 시장실패와는 거리가 멀다.
 • 정부가 개인의 선택을 교정할 가용할 정책수단이 많지 않은 가운데, 세금과 같은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반발이 많다. 그런데 세일러와 선스타인(Thaler & Sunstein)이 주창하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에 따르면, 선택의 자유 또한 개인의 행복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선택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사적인 영역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정책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진정한 행복을 위한 개인의 선택을 이끄는 정책의 수단으로 유용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는 전통적인 온정주의와는 달리, 가격 등 시장 메커니즘을 넘어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특징을 지닌다. 예를 들어, 흡연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온정주의에서는 흡연자가 아닌 비흡연자 등 타인에게 주는 피해, 즉 외부성을 주로 거론하지만,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는 외부성이 아니라 내부성, 즉 흡연자 자신에 대한 영향을 문제 삼는다. 한편 그 개입 방식에 있어서는 조심스럽다. 특히,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자들은 정책에서 의도하는 방식으로 디폴트 옵션을 설정해 놓고, 다만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선택을 자유롭게 하여 초기 값으로 유도하는 넛지의 방식을 구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개입을 하되, 그 개입은 개인들의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최소화하여, 또한 자유방임적이라는 것인데 개인의 행복증진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 **넛지(Nudge)** :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경제적 유인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선택설계의 제반 요소.
- ③ (○) **간접적·유도적인 정부개입방식, 촉매적 정책수단** : 전통경제학에서는 명령지시적 정부규제나 경제적 유인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했으나 행동경제학에서는 개인의 행동 변화를 위한 다양한 선택설계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정책수단으로서 다양한 넛지 도구를 제시(예) 디폴트 옵션의 조정, 정보와 선택 대안의 단순화, 현저성(salience)과 주목(attention) 효과 제고, 사회적 규범 활용, 정보공개 및 시각정보를 활용한 경고, 기억의 환기, 과거 선택의 특성과 결과 제공 등)
- ④ (○) **엄격하게 검증된 증거에 기반한 정책 선택·결정** : 이론적 토대인 행동경제학의 연구방법 자체가 각종 실험(실험실실험, 자연실험, 무작위통제실험)을 통한 귀납적 분석에 기초함. “정책실험 등의 테스트를 통해 개입 수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입 수단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한 후 개입 수단을 조정하고 적용하는 방법론(test-learn-adapt)을 개발·활용
 * 넛지이론(Nudge Theory)은 새행정학 3.0에서 추가된 내용으로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예상되므로 다음 요약내용을 반드시 알아둘 것.

답 ①

넛지이론(Nudge Theory) - 세일러와 선스타인(Thaler & Sunstein)> (새행정학 3.0(이중수 외 공저) p.136~145)

개념
·
대두
배경

- 실제의 인간 행동에 관한 행동경제학의 통찰을 정책 설계 및 집행에 적용·응용한 이론.
- 행동적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에 관한 규범적 근거와 이에 적합한 정책 수단(넛지)을 제시
- 행동적 시장실패(behavioral market failure) :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한 불확실성 상황에서 판단·선택을 효율적 수행을 위한 '휴리스틱(heuristic)'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오류(cognitive error)와 행동 편향(behavior bias)으로 인한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행동경제학에서 지칭하는 개념.
- 정부는 선택설계자(choice architect) 역할을 수행하며, 전통적 정책수단인 법률과 규제, 경제적 유인 수단(조세, 보조금) 등과 구별되는 새로운 정책수단인 넛지(nudge)를 활용. 넛지는 행동경제학이 발견한 인간의 행동 메커니즘을 정책에 응용한 것.

* **행동경제학** : 넛지의 이론적 근거. 인간 본성에 대한 전통경제학(신고전학과 경제학)의 완전한 합리성 가정의 비현실성을 비판, 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경제학에 반영해 인간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성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결정을 유도하는 대안을 제시.

구분	신고전학과 경제학(전통경제학)	행동경제학
인간관	완전한 합리성 완전한 이기성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	제한된 합리성, 생태적 합리성 이타성·호혜성(사회적 본능, 사회적 선호) 심리적 인간(homo psychologicus)
의사결정 모델 (선택행동이론)	효용극대화 행동 기대효용이론(효용함수)	만족화 행동, 휴리스틱 전망이론(가치함수)
연구방법	가정에 기초한 연역적 분석	실험을 통한 귀납적 분석
정부 역할의 근거와 목적	시장실패와 제도실패 재화의 효율적인 생산·공급	행동적 시장실패 바람직한 의사결정 유도(행동 변화)
정책 수단	법과 규제, 경제적 유인 수단	넛지(선택설계 : choice architecture)

시스템 I의 사고체계(제한된 합리성)

```
graph LR; A[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판단과 선택] --> B[휴리스틱에 의한 의사결정]; C[물리적·제도적·사회적 환경] --> B; D[개인 선호의 불명확성] --> B; B -- "인지적 오류  
행동 편향" --> E[행동적 시장실패]; E --> F((개인의 행동변화)); G[선택설계자 (정부, 공무원)] -- "사회적 선택설계" --> H((넛지)); H -- "이용" --> B; H --> E;
```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판단과 선택

- 물리적·제도적·사회적 환경
- 개인 선호의 불명확성

휴리스틱에 의한 의사결정

인지적 오류
행동 편향

행동적 시장실패

개인의 행동변화

넛지

-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 촉매적 정책수단(간접적·유도적 정부개입)
- 엄격하게 검증된 증거에 기반한 정책 선택·결정
- 급진적 점증주의 관점(단절적 변화로 보이는 혁신적 변화는 지속적인 소규모 변화의 누적된 결과)

사회적 선택설계

선택설계자 (정부, 공무원)

주요 내용	인간의 사고체계와 행동적 시장실패	• 행동경제학에서의 인간의 사고체계(두 가지 인지시스템) [시스템 1(자동시스템) : 신속, 직관적 사고(휴리스틱), 현실 세계 인간(Human : 휴먼) 시스템 2(숙고시스템) : 신중, 의식적 사고(심사숙고), 합리적 인간(Econ : 이콘) • 불확실한 상황과 조건에서 휴리스틱(시스템 1)을 활용한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지적 오류와 행동 편향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방해받게 되어 개인적 차원에서 중대한 피해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행동적 시장실패'																																	
	넛지	• 넛지 :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경제적 유인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선택설계의 제반 요소. • 선택설계 : 선택할 대안이 정책 대상자에게 제시되는 방법과 이를 통해 판단, 선택,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방안을 설계하는 것. 개인의 인지 오류를 이용한 선택설계와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는 환경적 요인(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여 개인의 의지적 판단을 통해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선택설계로 구분됨																																	
	행동적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넛지의 특성	①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 정부는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줌. 개인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개입한다는 측면에서 개입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개인에게 선택의 옵션을 제공하고, 특정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임. • 정부의 개입 대상 :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오류와 행동 편향을 바로잡는 '수단 개입주의' • 정부의 개입 수준(강도) : 물질적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들의 후생을 개선키는 '부드러운 개입주의(soft paternalism)' ② 간접적·유도적인 정부개입방식, 촉매적 정책수단 : 전통경제학에서는 명령지시적 정부규제나 경제적 유인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했으나 행동경제학에서는 개인의 행동 변화를 위한 다양한 선택설계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정책수단으로서 다양한 넛지 도구를 제시(예) 디폴트 옵션의 조정, 정보와 선택 대안의 단순화, 현저성(salience)과 주목(attention) 효과 제고, 사회적 규범 활용, 정보공개 및 시각정보를 활용한 경고, 기억의 환기, 과거 선택의 특성과 결과 제공 등) <table><tr><th colspan="3">전통경제학의 정책수단</th><th colspan="4">행동경제학의 정책수단</th></tr><tr><th>규제적 정책수단</th><th colspan="2">유인적 정책수단</th><th colspan="4">촉매적 정책수단</th></tr><tr><td>선택의 제거 및 제약</td><td colspan="2">선택의 유도 및 촉진</td><td colspan="4">선택의 유도 및 촉진, 선택설계</td></tr><tr><td>명령과 금지, 통제</td><td>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와 역인센티브</td><td>정보제공 (설득)</td><td>정보의 단순화와 프레이밍</td><td>물리적 환경의 변화</td><td>디폴트 옵션의 변화</td><td>사회규범과 현저성의 활용</td></tr></table> ③ 엄격하게 검증된 증거에 기반한 정책 선택·결정 : 이론적 토대인 행동경제학의 연구방법 자체가 각종 실험(실험실실험, 자연실험, 무작위통제실험)을 통한 귀납적 분석에 기초함. “정책실험 등의 테스트를 통해 개입 수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입 수단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한 후 개입 수단을 조정하고 적용하는 방법론(test-learn-adapt)을 개발·활용 ④ 급진적 점증주의(radical incrementalism) 관점 (단절적 변화로 보이는 많은 혁신적 변화가 사실은 지속적이고 부단한 소규모 변화가 누적된 결과로 보는 시각) : 정책 대상집단의 인지적 오류를 보완하여 대상집단의 자율적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넛지 방식의 특성을 감안하면 극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나 소규모 변화가 축적되면 기존과는 확연히 차이나는 혁신적 변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봄.						전통경제학의 정책수단			행동경제학의 정책수단				규제적 정책수단	유인적 정책수단		촉매적 정책수단				선택의 제거 및 제약	선택의 유도 및 촉진		선택의 유도 및 촉진, 선택설계				명령과 금지, 통제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와 역인센티브	정보제공 (설득)	정보의 단순화와 프레이밍	물리적 환경의 변화	디폴트 옵션의 변화	사회규범과 현저성의 활용
	전통경제학의 정책수단			행동경제학의 정책수단																															
규제적 정책수단	유인적 정책수단		촉매적 정책수단																																
선택의 제거 및 제약	선택의 유도 및 촉진		선택의 유도 및 촉진, 선택설계																																
명령과 금지, 통제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와 역인센티브	정보제공 (설득)	정보의 단순화와 프레이밍	물리적 환경의 변화	디폴트 옵션의 변화	사회규범과 현저성의 활용																													
넛지이론과 신공공관리론	<table><tr><th>구분</th><th>신공공관리론</th><th>넛지이론</th></tr><tr><td>이론의 학문적 토대</td><td>신고전학과 경제학, 공공선택론</td><td>행동경제학</td></tr><tr><td>합리성</td><td>완전한 합리성, 경제학 합리성</td><td>제한된 합리성, 생태적 합리성</td></tr><tr><td>정부 역할의 이념적 기초</td><td>신자유주의, 시장주의</td><td>자유주의적 개입주의</td></tr><tr><td>정부 역할의 근거와 한계</td><td>시장실패와 제도실패, 정부실패</td><td>행동적 시장실패와 정부실패</td></tr><tr><td>공무원상</td><td>정치적 기업가</td><td>선택설계자</td></tr><tr><td>정부 정책의 목표</td><td>고객주의, 개인의 이익 증진</td><td>행동 변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td></tr><tr><td>정책 수단</td><td>경제적 인센티브</td><td>넛지</td></tr><tr><td>정부개혁 모델</td><td>기업가적 정부</td><td>넛지 정부</td></tr></table>						구분	신공공관리론	넛지이론	이론의 학문적 토대	신고전학과 경제학, 공공선택론	행동경제학	합리성	완전한 합리성, 경제학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생태적 합리성	정부 역할의 이념적 기초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정부 역할의 근거와 한계	시장실패와 제도실패, 정부실패	행동적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공무원상	정치적 기업가	선택설계자	정부 정책의 목표	고객주의, 개인의 이익 증진	행동 변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	정책 수단	경제적 인센티브	넛지	정부개혁 모델	기업가적 정부	넛지 정부		
구분	신공공관리론	넛지이론																																	
이론의 학문적 토대	신고전학과 경제학, 공공선택론	행동경제학																																	
합리성	완전한 합리성, 경제학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생태적 합리성																																	
정부 역할의 이념적 기초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정부 역할의 근거와 한계	시장실패와 제도실패, 정부실패	행동적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공무원상	정치적 기업가	선택설계자																																	
정부 정책의 목표	고객주의, 개인의 이익 증진	행동 변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																																	
정책 수단	경제적 인센티브	넛지																																	
정부개혁 모델	기업가적 정부	넛지 정부																																	

평가	• 효용 : 넛지를 통한 정책은 비강제적이고, 정책대상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전통적 수단에 비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임. • 한계 : ① 넛지 정책의 효과는 단기간에 소멸되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행동 변화를 보장하지 못함. ② 넛지 정책은 기존의 정책 수단에 비해 사회적 혁신이라고 부를 만큼의 대규모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수단을 대체하는 새로운 수단이 되기 곤란함. ③ 선택설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인지적 오류와 행동 편향으로 인한 '행동적 정부실패'의 문제도 제기됨.
----	--

관련기출

넛지(nudge)의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2 지방7급

- ㉠ 넛지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을 선택설계라고 한다.
- ㉡ 정책대상집단의 행동에 개입하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한다.
- ㉢ 넛지는 디폴트 옵션 설정 방식처럼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수단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

답 ④

8 현행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 ②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 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령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해설

이하 법률 규정은 지방교부세법

- ① (○) 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 ② (○)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 ③ (×)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답 ③

관련기출

1.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은?

2014 서울7급(지방자치론)

- ①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교부하여야 한다.
- ② 분권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교부세 교부를 신청하면 이를 심사하여 교부하고, 신청이 없으면 교부할 수 없다.
- ④ 보통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2.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 경찰승진

-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지출 용도에 제한이 없는 일반재원이다.
- ③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루어진다.
- ④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교부하는 특정재원이다.

3. 지방교부세법 상 특별교부세에 대한 틀린 설명은?

2016 지방7급(지방자치론)

- ① 국가적 장려사업, 지역 역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정해진 일정 금액을 교부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도 교부할 수 있다.
- ③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50% 해당 금액을 교부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답 1. ⑤ 2. ② 3. ②

9 현행 법령상 공공기관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 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은 직원 정원 50명 이상, 총수입액 30억 원 이상, 자산규모 10억 원 이상이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타 공공기관의 일부만을 세분하여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①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1. 직원 정원 : 300명 이상
2. 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한다) : 200억원 이상
3. 자산규모 : 30억원 이상

공공기관의 구분

-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요건 :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 원 이상, 자산규모 30억 원 이상(단, 요건에 해당되어도 타 법률에 따른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의 공공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 가능)
 (2) 기타 공공기관의 지정 : 공기업·준정부기관 외의 기관.
 (3) 세부 지정기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 직원 정원 : 300명 이상, ㉡ 총수입액 : 200억 원 이상, ㉢ 자산규모 : 3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 중 지정 공공기관 중 시장성이 큰 기관으로 정부가 자체수입 비율·업무특성을 감안하여 공기업으로 지정한 기관		공공기관 중 시장성보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기관으로 정부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 지정		공기업·준정부기관 외의 공공기관. 기관의 성격,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 가능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①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 ②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85% 이상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주1)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수입액 비중이 85%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

②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③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지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④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답 ②

관련기출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 소방간부후보

- 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라 구분된다.
- ② 공기업에는 시장형과 준시장형이 있고, 자산규모는 두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이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 ④ 준정부기관에는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이 있고, 기금관리형에는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도 포함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가7급(수정)

- 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 ②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 중 지정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답 1. ⑤ 2. ④

10 카플란과 노턴(Kaplan & Norton)의 균형성과표 (BSC)에서 네 가지 관점에 따른 성과지표가 잘못 연결된 것은?

- ① 고객관점 :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참여
- ② 내부 프로세스 관점 : 적법 절차
- ③ 재무적 관점 : 자본수익률
- ④ 학습과 성장 관점 : 정보시스템 구축

해설

① (×)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참여는 내부프로세스 관점에 대한 성과지표임

BSC 각 관점별 측정지표(성과지표)

재무 관점	순이익, 매출액, 자본수익률, 수지차(收支差 : 예산 대비 차이), 재정건전성 등(정부조직의 경우 순이익, 매출액 등의 지표는 사용하기 곤란하고 사업 집행이나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과 편익[효용]이 적용될 수 있음)
고객관점	고객만족도, 신규고객 증감, 고객충성도, 고객유지율, 정책수용도, 민원인 불만율, 삶의 질에 대한 통계지표.
내부프로세스 관점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나 시민의 참여 보장, 적법절차 준수,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구조, 관련 정보의 공개, 정책수단의 적실성, 서비스전달시스템의 효율성.
학습과 성장 관점	조직 구성원의 직무수행능력, 직무만족도, 지식의 창조·관리, 인적자원의 역량개발정도, 지속적인 자기혁신·성장, 내부 제안 건수, 학습동아리(스터디그룹) 수.

답 ①

관련기출

1. BSC에서 고객관점의 성과지표가 아닌 것은?

2019 소방간부

- ① 고객 만족도 ② 민원인의 불만을 ③ 정책 준응도 ④ 의사결정 과정에의 시민 참여 ⑤ 신규 고객의 증감률

2. 균형성과표(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 지방9급

- ① 조직의 장기적 전략 목표와 단기적 활동을 연결할 수 있게 한다.
 ② 재무적 성과지표와 비재무적 성과지표를 통한 균형적인 성과관리 도구라고 할 수 있다.
 ③ 재무적 정보 외에 고객, 내부 절차, 학습과 성장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관점을 추가한 것이다.
 ④ 고객 관점에서의 성과지표는 시민참여, 적법절차, 내부 직원의 만족도, 정책 준응도, 공개 등이 있다.

3. 균형성과표(BSC)의 관점과 측정지표가 바른 것은?

2017 사회복지9급

- ① 학습과 성장 관점- 직무만족도 ② 내부 프로세스 관점- 민원인의 불만을
 ③ 재무적 관점- 신규 고객의 증감 ④ 고객 관점-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구조

답 1. ④ 2. ④ 3.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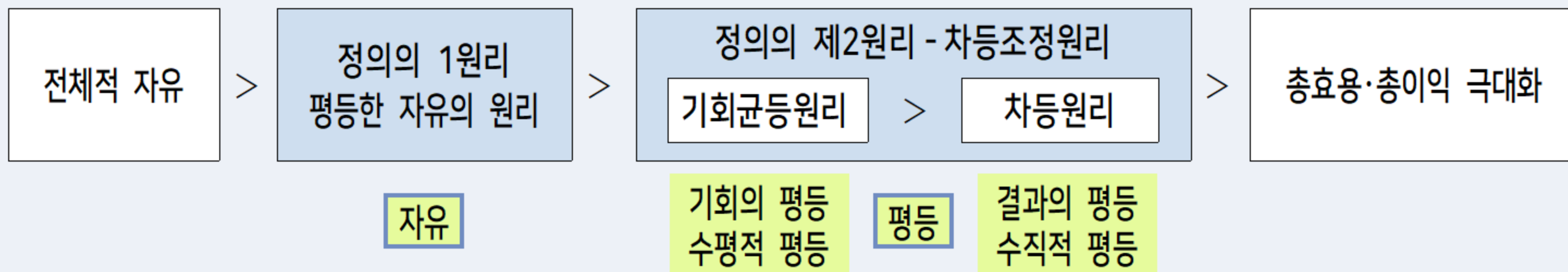
11 롤스(J. Rawls)가 주장한 사회 정의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차등원리’란, 저축 원리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③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란,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 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④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와 ‘차등원리’가 충돌할 때에는 후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해설

④ (×)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와 ‘차등원리’가 충돌할 때에는 전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 롤스(J. Rawls)의 사회정의 원칙에 따른 바람직한 정책기준(우선순위)



■ 롤스(J. Rawls) - 사회 정의의 기본원리

- ㉠ 정의의 제1원리 - 평등한 자유의 원리(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 [정치적 측면] :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최대의 동등한 자유를 가져야 하며, 기본적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자유우선의 원칙(예 정치적 자유[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언론·출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 정의의 제2원리 - 차등조정원리 [사회·경제적 측면] : 자유 외의 사회적·경제적 가치의 불평등을 균형화되도록 조정(정당한 불평등의 조건)
 ㉢ 기회균등원리 : 불평등의 근원이 되는 직무·직책은 모두에게 균등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등 능력발휘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적합한 지위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함.
 ㉣ 차등원리(Difference Principle) : 기회균등 원리가 전제되고 저축의 원리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불평등에 대한 시정은 가장 불리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조정되어야 함. - 최소극대화 원리(Maximin ;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많은 편익을 제공)
 • 저축원리 : 사회협동의 산물 중 어느 정도를 후세대의 복지를 위해 현재 사회구성원에게 모두 배분하지 않고 유보나 저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규정하는 원리(장래를 위한 설비 등 생산수단 및 교육에 투자)

답 ④

관련기출

1. 롤스(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20 경간부

- ㉠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이념적·가설적 상황으로서 원초적 상태를 설정하였고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정의의 원리를 도출한다.
 ㉢ 정의의 두 가지 기본원리 중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이며, 제2원리는 차등조정원리이다. 제2원리 내에서 충돌이 생길 때에는 차등의 원리가 기회균등의 원리에 우선한다.
 ㉣ 기회균등의 원리는 결과의 공평을 중시하며 차등의 원리는 기회의 공평을 중시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롤스의 사회 정의의 원리와 거리가 먼 것은?

2014 서울9급/2015 사회복지9급

- ① 원초상태 하에서 합의되는 일련의 법칙이 곧 사회정의의 원칙으로서 계약 당사자들의 사회협동체를 규제하게 된다.
 ②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로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③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차등 원리’는 저축 원리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④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기회 균등의 원리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 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⑤ 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는 차등원리가 기회균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3. 롤스(J. Rawls)의 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1 경찰간부

- ① 롤스의 정의의 두 가지 기본 원리는 특수한 사실의 유·불리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확실한 원초적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규칙 또는 원칙은 불공정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 ② 롤스의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란, 개인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③ 저축원리란 사회 협동의 모든 산물 중 어느 정도 비율의 것을 분배나 재분배에 충당하지 않고, 설비나 기타 생산수단 및 교육에의 투자 등의 형태로 장래 세대의 복지를 위해 유보 내지 저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규정하는 원리이다.
- ④ 정의의 두 가지 기본원리 중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며 제2원리 중 기회균등원리가 차등원리에 우선한다.

답 1. ① 2. ⑤ 3. ④

12 현행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 ②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 ④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

•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X)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답 ②

관련기출

1. 국가재정법 제89조 규정 상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2015 서울9급(수정)

- ㉠ 부동산 경기 등 경기부양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 결함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
-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2.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21 국가9급

-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 ②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 ③ 경기침체, 대량실업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경제협력, 해외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답 1. ③ 2. ④

13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이 아닌 것은?

- 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 ②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
- ③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 ④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해설

② (X) 가상자산도 등록대상재산으로 포함시키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2023.12.14.부터 시행되며 일정 가액 이상이라는 규정도 없다.

•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2.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다음 각 목의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 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
 - 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
 - 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 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권
 - 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무
 - 바.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

- 사.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 아.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 자.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차.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카.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4.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5. 주식매수선택권
-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 (단, 2023.12.14. 시행)

답 ②

14 현행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규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특정한 분야의 사업은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 ②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일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설

- ②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의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규정된 사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답 ②

관련기출

1.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22 해경승진

- ①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9년부터 도입하였고,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도 분석의 대상이 된다.
- ② 사업 주무부처(기관)에서 수행하며, 기술적인 검토와 예비 설계 등에 초점을 맞춘다.
- ③ 신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다.
- ④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 수요, 편익, 비용을 추정하고 재무성 평가와 민감도 분석을 시행한다.

2.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2022 지방9급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가) 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나) 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가) 300, (나) 100 ② (가) 300, (나) 200 ③ (가) 500, (나) 250 ④ (가) 500, (나) 300

답 1. ② 2. ④

15 사바스(Savas)가 구분한 공공서비스의 유형 중에서 비경합성과 비배타성(비배제성)을 모두 가진 것은?

- ① 시장재 ② 요금재 ③ 공유재 ④ 집합재

해설		
재화의 유형별 특성 및 정부의 관여 형태		
특 징	비배제성(평등성·무임승차성)	배제성(차별성·수익자부담·응익성[應益性])
비경합성 (공동소비성, 비분할성)	(순수)공공재(public goods), 집합재(collective goods) ① 예 : 국방·치안·외교·방역서비스, 도로·등대·가로등 ② 공급상 문제점 : 무임승차 ⇨ 시장에서 공급 곤란(과소공급) ③ 정부개입 : 공급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공급(무료)하며(계약에 의해 민간기업이 생산할 수도 있음), 공급비용은 세금 등 강제적 수단으로 징수.	요금재·유료재(toll goods) ① 예 :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상·하수도, 고속도로 ② 공급상 문제점 : 규모의 경제와 자연독점 우려 ③ 정부개입 : 민간기업이 생산하도록 가능한 한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일부재화의 자연독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가하거나 직접 공급하며, 공급비용은 서비스 판매(유료)를 통해 조달.
	공동소유재·공유재(common - pool goods) ① 예 : 자연자원(산, 강, 바다, 개울가 수석, 어족자원, 지하수, 천연자원, 관개용수(灌溉用水), 예산, 국립공원 등 ② 공급상 문제점 : ㉠ 과다사용과 자원손실(공유지의 비극), ㉡ 비배제성에 따른 비용 회피 ③ 정부개입 : ㉠ 자원고갈 방지를 위한 공급·소비에 대한 적극적 규제(예 환경오염 방지정책), ㉡ 공공부문에서의 공급비용 부담(예 정부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나 예방접종)	사적재(私的財)·사용재(私用財)·민간재(private goods) ① 예 : 일상생활의 재화(냉장고, 빵, 자동차 등) ② 공급상 문제점 : 시장 가격기구에 의해 응익주의에 따라 수요·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문제 없음. ③ 정부개입 : 원칙적으로 민간기업이 생산하도록 자율성을 보장, 공익차원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서비스의 안정성과 규격기준 설정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기본적 수요의 충족 등에 부분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음.

답 ④

16 다음 중 2023년 현재 조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이를 직접 납부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간접세를 포함하고 있는 국세의 종목은 모두 몇 개인가?

㉠ 자동차세 ㉡ 부가가치세 ㉢ 담배소비세 ㉣ 주세 ㉤ 개별소비세 ㉥ 종합부동산세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국세 중 간접세는 개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지방세 중 간접세는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주행분), 레저세	
국세의 유형(14개 세목) <pre> graph LR A[국세] --> B[내국세 13개] A --> C[관세] B --> D[보통세] B --> E[목적세] D --> F[직접세] D --> G[간접세] F --> H[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G --> I[개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E --> J[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pre>	

답 ③

관련기출	
1. 다음 내용에서 국세 중 직접세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2022 경찰간부
㉠ 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주세 ㉥ 자동차세	
① ㉠, ㉡, ㉢ ② ㉡, ㉣, ㉥ ③ ㉠, ㉢, ㉥ ④ ㉡, ㉣, ㉥	
2. 다음 내용에서 국세로서 간접세인 것은 몇 개 인가?	2021 해경승진
㉠ 소득세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종합부동산세 ㉤ 주세 ㉥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상속세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국세 중 간접세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2018 국회8급
① 개별소비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주세 ② 증권거래세, 증여세, 상속세, 관세	
③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④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⑤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4.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2019 군무원9급
㉠ 재산세 ㉡ 부가가치세 ㉢ 담배소비세 ㉣ 주세 ㉤ 개별소비세 ㉥ 종합부동산세	
① ㉡, ㉣, ㉥ ② ㉢, ㉣, ㉥ ③ ㉡, ㉢, ㉣ ④ ㉠, ㉡, ㉢	
5. 다음 조세 중 국세이며 간접세인 것을 모두 고르면?	2019 국회8급
㉠ 자동차세 ㉡ 주세 ㉢ 담배소비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종합부동산세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6. 국세 중 직접세에 해당하는 것은?	2016 전직시험(8·9급)
① 종합부동산세 ② 개별소비세 ③ 증권거래세 ④ 부가가치세	

답 1. ① 2. ㉠, ㉡, ㉢ 3. ① 4. ① 5. ④ 6. ①

17 로그롤링(log rolling)이나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 쉬운 정책유형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상징정책

해설

log rolling이나 pork barrel은 분배정책에서 주로 나타난다.

■ **포크배럴(Pork Barrel Politics ; 돼지구유통 정치, 나눠먹기식 정치)** : 연방의회의원이 출신지역 주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지출하게 하는 지역개발 정부보조금 의안과 관련된 용어. 정치인·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생색을 내기 위해 자기 지역구나 특정 지역 주민의 환심을 사려는 교량건설, 고속도로, 부두, 댐 등과 같은 지역개발사업에 정부예산을 끌어오는 이기적인 행위를 지칭하며 지역구의 선심사업을 위해 정부의 예산 남용 초래. 특정 배분정책에 관련된 자들이 그 혜택을 서로 나눠가지려 노력하는 현상을 지칭하기도 함.

■ **Log-rolling(담합·통나무굴리기), Vote Trading(투표의 교환·거래·매수)**

- ㉠ 이권(利權)이 걸린 몇 개의 법안을 관련 의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통과시키는 행태를 뜻하는 미국 의회용어. 통나무를 운반할 때 서로 협력하여 굴리는 데서 유래. 담합에 의해 자신의 선호와는 무관한 대안에 투표하는 집단적 의사결정행태가 이루어지는데, 의원들이 의회에서 안건을 처리할 때 선호의 강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나타나며, 자신이 선호하는 이슈에 대한 지지를 얻는 조건으로 자신은 선호하지 않지만, 타인이 선호하는 이슈를 지지해주는 거래를 하는 것.
- ㉡ 정책과정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며 보통 특정 이익에 대한 수혜를 대가로 상대방이 원하는 정책에 동의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짐. 분배정책 결정 및 집행에서 구유통정치 같은 다툼이 있는 데도 참여자 간 정면대결보다 갈라먹기식의 결정이 이뤄짐. 예)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보조 확대 정책을 얻는 대가로 실업자들의 실업보험금 증대정책에 동의해 주는 경우

답 ①

관련기출

1.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밀어주기(log - rolling)와 나눠먹기(pork - barrel)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유형은?

2007 국회8급

- ① 배분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구성정책 ⑤ 추출정책

2.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소방간부

- ① 알몬드(Almond)와 파웰(Powell)은 정책을 구성정책, 추출정책, 재분배정책, 규제정책으로 유형화했다.
- ② 로위(Low)는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양식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 ③ 로위(Low)의 정책유형론은 정책유형들 간의 높은 상호배타성을 특징으로 한다.
- ④ 로위(Low)에 따르면 규제정책에서는 포크배럴(pork-barrel)이나 로그롤링(log-rolling)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 ⑤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에 따르면 보호적 규제정책은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 우려가 적어 참여자 사이의 갈등 발생 가능성이 낮다.

3. 로위(Low)의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20 국회9급

- ① 분배정책의 예로 선거구 조정, 정부기관 신설 등이 있다.
- ② 재분배정책의 예로 누진세, 사회보장책 등이 있다.
- ③ 분배정책에서는 로그롤링(log rolling)이나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④ 기업에게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 ⑤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의 달라질 수 있다.

4.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짝지은 것은?

2017 지방7급

(㉠)은/는 의회에서 이권과 관련된 법안을 해당 의원들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협력하여 통과시키거나, 특정이익에 대한 수혜를 대가로 상대방이 원하는 정책에 동의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은/는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된 법안이나 정책 교부금을 둘러싸고 의원들이 그 혜택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노력하는 현상을 말한다.

- ① ㉠ 로그롤링(log rolling), ㉡ 포크배럴(pork barrel) ② ㉠ 로그롤링(log rolling), ㉡ 지대추구(rent seeking)
- ③ ㉠ 지대추구(rent seeking), ㉡ 로그롤링(log rolling) ④ ㉠ 포크배럴(pork barrel), ㉡ 로그롤링(log rolling)

5. 로위(Low)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 중 분배정책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0 국가7급

㉠ 정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연합을 형성한다.

㉡ 누진소득세와 같이 이데올로기적인 기반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 로그롤링(log-rolling)이나 포크 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난다.

㉣ 집단 사이의 갈등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정부의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동원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6. 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서울9급

- ① 이해당사자 간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벌어지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규제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
- ② 일반적으로 포크배럴(pork barrel) 현상이 발생한다.
- ③ 도로, 다리의 건설,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제공 등이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 ④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로그롤링(log rolling) 현상이 발생한다.

7.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 사회복지9급

㉠ 분배정책에서는 로그롤링(log rolling)이나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 분배정책은 사회계급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정책보다 갈등이 더 가시적이다.

㉢ 누진소득세, 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은 재분배정책이다.

㉣ 재분배정책에서는 자원배분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연합이 분배정책에 비하여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 ① ㉠, ㉡ ② ㉠, ㉢ ③ ㉡, ㉣ ④ ㉢, ㉣

답 1. ① 2. ② 3. ① 4. ① 5. ② 6. ① 7. ②

리더십이론의 유형

속성론 [특성론· 자질론] (Trait Approach)	① 의의 : 리더십은 일반인과 달리 리더가 지니는 고유한 특성·자질. 성공적인 지도자와 그렇지 못한 지도자들의 분별방법을 규명하기 위해서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는 지도자들의 신체특징·지능·감정적 특징·성격·임무수행능력·사교성 등을 광범위하게 분석. 예 Barnard의 인내력·결단력·설득력·책임감·지적 능력·건강·지구력 ㉠ 통일적·균일적·단일적 자질론 : 자질의 통일성·불변성 - 지도자는 하나의 단일적·통일적 자질을 구비 - 이러한 자질을 가진 자는 어느 집단, 어떤 상황에서도 지도자가 된다고 봄. ㉡ 성좌적·다원적 자질론 : 단일론 수정, 자질의 복합성·가변성 - 여러 자질을 결합하여 리더의 인성 파악. ② 한계 ㉠ 상황 변수를 고려 안 함 - 상황에 따라 리더의 특성은 상이함. ㉡ 지도자의 보편적 속성을 확인하는 데 실패 - 연구자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속성이 다름. ③ 속성이론의 재조명 : 1980년대 이후 속성론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된 점을 지적하면서 신속성론이 대두됨.									
행태론 [행동 유형론] (Behavioral Approach)	① 의의 : ‘어떤 특성을 가진 자가 리더가 되는가?’ 보다는 ‘성공적인 리더에게서 보이는 리더십 행태는 어떠한가?’의 관찰가능한 리더의 행태를 분석하여 지도행태 유형론을 발전시킴. 모든 상황에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유형이 있다고 보고 리더의 행태와 추종자들이 보이는 감정적·행태적 반응 사이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규명.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유형에 맞춰 리더십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봄. 추종자와의 교환관계를 중시하여 거래적 리더십 연구에 주력. ② 내용 <table><tr><td>㉠ Michigan 대학, Likert : 직무(생산)중심형, 직원중심형(생산성, 부하의 만족감 높임)</td><td>인간>과업</td></tr><tr><td>㉡ Lewin, Lippitt, White - 아이오와(Iowa) 대학 : 권위형, 민주형(생산성과 사기가 모두 높아 가장 효과적), 자유방임형</td><td></td></tr><tr><td>㉢ Ohio 대학 : 구조설정 vs 배려기준 4가지 유형. 높은 구조설정능력과 높은 배려행태일 때 가장 바람직.</td><td>인간+과업</td></tr><tr><td>㉣ Blake와 Merton : 관리망(생산 vs 인간) – 무관심형·친목형·과업형·중도형·단합형(팀형)으로 구분. 이상형은 단합형)</td><td></td></tr></table> ② 한계 ㉠ 상황 변수를 고려 안 함 -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은 상황에 따라 상이함. ㉡ 리더의 행동을 구분하고 측정하는 데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측정방법이 개발되지 못함. ㉢ 대부분의 2요인 분류법을 이용해 리더의 행동을 너무 광범위한 두 범주로 단순화	㉠ Michigan 대학, Likert : 직무(생산)중심형, 직원중심형(생산성, 부하의 만족감 높임)	인간>과업	㉡ Lewin, Lippitt, White - 아이오와(Iowa) 대학 : 권위형, 민주형(생산성과 사기가 모두 높아 가장 효과적), 자유방임형		㉢ Ohio 대학 : 구조설정 vs 배려기준 4가지 유형. 높은 구조설정능력과 높은 배려행태일 때 가장 바람직.	인간+과업	㉣ Blake와 Merton : 관리망(생산 vs 인간) – 무관심형·친목형·과업형·중도형·단합형(팀형)으로 구분. 이상형은 단합형)		
㉠ Michigan 대학, Likert : 직무(생산)중심형, 직원중심형(생산성, 부하의 만족감 높임)	인간>과업									
㉡ Lewin, Lippitt, White - 아이오와(Iowa) 대학 : 권위형, 민주형(생산성과 사기가 모두 높아 가장 효과적), 자유방임형										
㉢ Ohio 대학 : 구조설정 vs 배려기준 4가지 유형. 높은 구조설정능력과 높은 배려행태일 때 가장 바람직.	인간+과업									
㉣ Blake와 Merton : 관리망(생산 vs 인간) – 무관심형·친목형·과업형·중도형·단합형(팀형)으로 구분. 이상형은 단합형)										
상황론 (Situational Approach)	① 의의 : 효과적 리더십은 상황에 따라 다름.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까닭은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지도에 적합한 행태를 보이기 때문임. 지도자, 추종자, 상황의 상호작용에 따라 리더십은 상이하며, 상황변수가 가장 중요. 모든 상황에서 유일 최선인 리더십 유형은 없으며 여러 변수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근거한 리더의 융통성 있는 행위만이 그 상황에서 행사되는 리더십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② 내용 <table><tr><td>㉠ Tannenbaum, Schmidt : 리더 – 부하 – 권력관계</td></tr><tr><td>㉡ Fiedler의 상황적 리더십 : 리더 – 부하 – 상황의 유리성(부하와의 관계, 지위권력, 과업구조). LPC점수 기준 관계중심·과업중심 리더.</td></tr><tr><td>㉢ Reddin : 3차원 모형(과업 – 인간 – 지도의 효과성)</td></tr><tr><td>㉣ Hersey와 Blanchard : 3차원 모형[생애주기론](과업 – 인간 – 부하성숙도), 성숙도가 높을수록 지시형 ⇨ 설득형 ⇨ 참여형 ⇨ 위임형.</td></tr><tr><td>㉤ House, Evans 경로·목표이론 : 지시형·지원형·성취지향형·참여형</td></tr><tr><td>㉥ Kerr, Jermier 리더십 대체물 접근법 – 대체물(代替物)과 중화물(中化物)</td></tr><tr><td>㉦ Yukl의 다중연결모형 : 원인변수, 매개변수, 상황변수</td></tr><tr><td>㉧ Graen과 Dansereau의 수직적 쌍방관계 : 리더와의 친밀도에 따라 내집단, 외집단</td></tr><tr><td>㉨ Vroom, Yetton, Jago의 규범적 리더십 이론</td></tr></table> ② 한계 :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특징인이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리더가 되는 지 설명하기 곤란하고, 지나치게 수많은 단편적인 상황에 적합한 리더의 행동이나 특성만을 파악하는 데 주력.	㉠ Tannenbaum, Schmidt : 리더 – 부하 – 권력관계	㉡ Fiedler의 상황적 리더십 : 리더 – 부하 – 상황의 유리성(부하와의 관계, 지위권력, 과업구조). LPC점수 기준 관계중심·과업중심 리더.	㉢ Reddin : 3차원 모형(과업 – 인간 – 지도의 효과성)	㉣ Hersey와 Blanchard : 3차원 모형[생애주기론](과업 – 인간 – 부하성숙도), 성숙도가 높을수록 지시형 ⇨ 설득형 ⇨ 참여형 ⇨ 위임형.	㉤ House, Evans 경로·목표이론 : 지시형·지원형·성취지향형·참여형	㉥ Kerr, Jermier 리더십 대체물 접근법 – 대체물(代替物)과 중화물(中化物)	㉦ Yukl의 다중연결모형 : 원인변수, 매개변수, 상황변수	㉧ Graen과 Dansereau의 수직적 쌍방관계 : 리더와의 친밀도에 따라 내집단, 외집단	㉨ Vroom, Yetton, Jago의 규범적 리더십 이론
㉠ Tannenbaum, Schmidt : 리더 – 부하 – 권력관계										
㉡ Fiedler의 상황적 리더십 : 리더 – 부하 – 상황의 유리성(부하와의 관계, 지위권력, 과업구조). LPC점수 기준 관계중심·과업중심 리더.										
㉢ Reddin : 3차원 모형(과업 – 인간 – 지도의 효과성)										
㉣ Hersey와 Blanchard : 3차원 모형[생애주기론](과업 – 인간 – 부하성숙도), 성숙도가 높을수록 지시형 ⇨ 설득형 ⇨ 참여형 ⇨ 위임형.										
㉤ House, Evans 경로·목표이론 : 지시형·지원형·성취지향형·참여형										
㉥ Kerr, Jermier 리더십 대체물 접근법 – 대체물(代替物)과 중화물(中化物)										
㉦ Yukl의 다중연결모형 : 원인변수, 매개변수, 상황변수										
㉧ Graen과 Dansereau의 수직적 쌍방관계 : 리더와의 친밀도에 따라 내집단, 외집단										
㉨ Vroom, Yetton, Jago의 규범적 리더십 이론										

답 ③

20 다음 중 현재 그 설치와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은 어느 것인가?

-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② 국가경찰위원회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 ④ 정보공개위원회

해설

중앙행정기관

- ① **개념** : 관할권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행정기관으로서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정부조직법이나 개별법)로 정함.
- ㉡ **범위** : 19부 3처 19청 6위원회 * 부·처·청은 독립제기관, 위원회는 합의제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19부 3처 17청 +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2청 6위원회(정부조직법 2조 2항에 근거법 명시)
- * 대통령경호처는 정부조직법 상 '청'이지만 관할권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기관이 아니므로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키지 않음.

-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아래 8개의 기관은 설치근거가 정부조직법이 아님)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신행정부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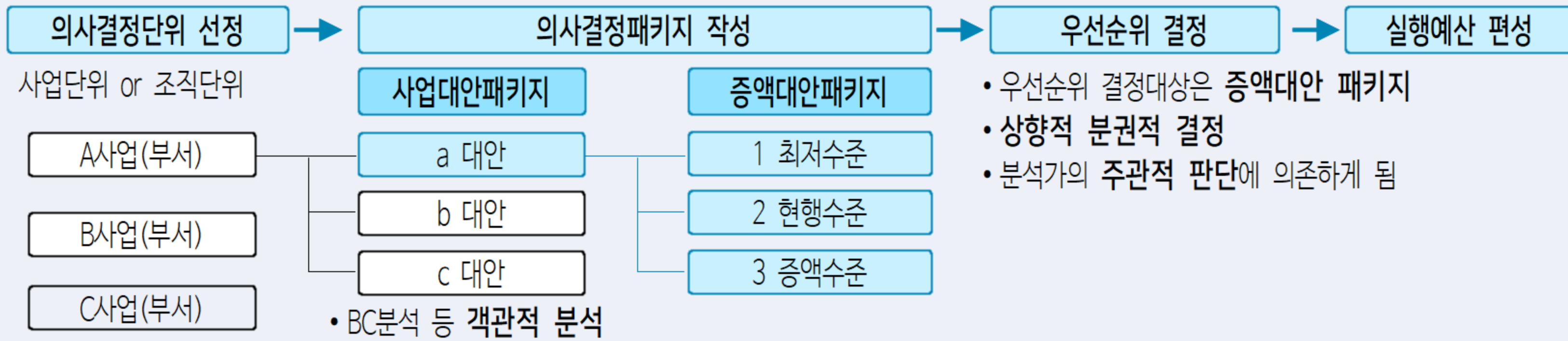
21 다음 중에서 영기준예산제도(ZBB)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새로운 사업의 구상보다는 기존 사업의 감축 관리에 목적을 둔다.
- ② 예산에 관한 의사결정이 하향적(top down)으로 진행된다.
- ③ 사업 검토가 조직의 경계 내에서 진행되는 폐쇄적인 의사결정의 일종이다.
- ④ 상급 관리계층에게 정보홍수와 업무과다를 초래한다.

해설

- ② (×) **상향적·분권적 의사결정, 조직구성원[관리자]의 참여 확대** : ZBB는 계획예산보다 운영 면에서 전문성을 적게 요구하므로 조직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분권화된 관리체계를 가짐. 정책결정항목이 위로 올라가면서 검토되고 순위가 결정되므로 전문참모가 아닌 계선기관의 중간관리자나 하급관리자에게 참여(훈련) 기회 제공. 중앙의 통제를 완화하면서도 중앙의 목표가 부처의 예산운영단위에서 존중되도록 하고 단위기관 고유업무의 특성을 중시하므로 다양한 이질적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체에서 그 효율성이 높을 수 있음.

• ZBB의 절차



답 ②

관련기출

1. 영기준 예산제도(Zero-Base Budget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 서울7급(2)

- 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예산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② 예산과정에서 상향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실무자의 참여가 확대된다.
- ③ 예산과정에서 정치적 고려 및 관리자의 가치관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 ④ 현 시점 위주로 분석하므로 장기적인 목표가 경시될 수 있다.

2. 영기준예산(ZBB)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2006 서울9급

- ① 의사결정단위 선정과 우선순위 결정을 중시
- ② 관리지향적 예산제도
- ③ 총체적·종합적 예산결정방식
- ④ 기존프로그램의 계속적인 재평가에 관심
- ⑤ 중앙집권적·하향적 예산결정

3. 계획예산(PPBS)과 영기준예산(ZBB)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2008 서울7급

- ① PPBS는 하향적이며, ZBB는 상향적이다.
- ② PPBS는 미시적 분석을, ZBB는 거시적 분석을 활용한다.
- ③ PPBS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기존의 프로그램 간의 예산변동액에 관심을 가지지만, ZBB는 기존의 프로그램의 계속적인 재평가에 관심을 가진다.
- ④ PPBS는 개방체제, ZBB는 폐쇄체제의 성격을 지닌다.
- ⑤ PPBS는 정책정향적이고 계획정향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ZBB는 사업정향적 성격이 강하다.

답 1. ③ 2. ⑤ 3. ②

22 다음 중 현재 군인·군무원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이 아닌 자는?

- ① 공립학교 교원
- ② 소방서장
- ③ 경찰서장
- ④ 검찰청 검찰사무관

해설

- ① 교육공무원, ② 소방공무원, ③ 경찰공무원은 특정직.
- ④ 검찰청 검찰사무관은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 반면,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 ①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2조 2항 2호는 공립[지방자치단체 설립] 대학·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을 예시). 우리나라 국가공무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
 - * 대법원장·대법관(법관), 검찰총장(검사),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경찰공무원), 소방청장(소방공무원)은 특정직.
 - * 교정직·검찰사무직 공무원, 철도경찰은 일반직.
 - * 교육전문직원 : 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 ② 일반직처럼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보장이 되지만, 담당직무가 특수하여 거기에 필요한 자격·복무규율, 보수체계, 신분보장 등에서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으로 별도로 분류한 유형
- ③ 개별법상 별도의 인사법령체계와 별도의 계급체계 적용. 계급정년제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답 ④

관련기출

1. 특정직 공무원이 아닌 것은?

2007 군무원

- ① 외무공무원
- ② 소방공무원
- ③ 국가정보원 직원
- ④ 감사원 직원

2. 공직분류 중 특정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22 군무원7급

- ① 경호공무원
- ② 경찰청장
- ③ 감사원 사무차장
- ④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3.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2019 지방7급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검사 ㉢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 도지사의 비서 ㉤ 국가정보원의 직원

① ㉠, ㉡, ㉢ ② ㉠, ㉢, ㉤ ③ ㉡, ㉢, ㉣ ④ ㉡, ㉢, ㉤

4.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이 아닌 것은?

2019 서울7급(1)

① 기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공립 대학 및 공립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③ 자치경찰공무원 ④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답 1. ④ 2. ③ 3. ④ 4. ①

23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소속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은 것은?

- ① 보조기관 ② 직속기관 ③ 합의제행정기관 ④ 자문기관

해설

지방자치법 상 집행기관

보조기관	① 부단체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각 행정기구(실·본부·국·과), ③ 지방공무원
소속 행정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 직속기관(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중소기업지도기관, 자치경찰기관 등)
	직속기관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설치
	사업소 특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설치
	출장소 외진 곳의 주민 편의, 특정지역 개발 촉진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설치
	합의제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자문기관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
하부행정기관(장)	자치구가 아닌 구(구청장), 읍(읍장), 면[행정면](면장), 동[행정동](동장)
교육·과학·체육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을 둠

답 ①

관련기출

1.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2015 지방7급(지방자치론)

① 소방기관 ② 출장소 ③ 부지사 ④ 사업소

2. 현행 지방자치법 상 보조기관은?

2013 해경간부

①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직속기관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업소 ④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출장소

3.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은?

2011 국가7급

① 부단체장 ② 사업소 ③ 출장소 ④ 읍·면·동

답 1. ③ 2. ① 3. ①

24 다음 중에서 대표 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① 킹슬리(D. Kingsley)가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 ② 주기적인 선거 결과에 기초하여 주요 관직을 임명하는 제도이다.
- ③ 정부정책의 형평성과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④ 실적주의 공무원제도 확립에 저해된다.

해설

② (×) 선거 결과에 따라 정권을 잡은 정당의 당원을 관료로 임용하는 제도는 엽관주의이다. 대표관료제는 사회집단의 인구구성비율을 고려하여 임용이 이루어진다.

대표관료제의 특징 구별

대표관료제의 특징인 것	대표관료제의 특징이 아닌 것
대표성·대응성·책임성·민주성	전문성·능률성·생산성, 대내적 민주성 확보
사회적 형평성, 실질적 기회균등	정치적 중립성 윤리와의 조화, 형식적 기회균등
결과의 평등 / 수직적 평등의 확보 / 수평적 평등의 저해(역차별) 우려	기회의 평등 / 수평적 평등의 확보 / 수직적 평등의 저해, 역차별 방지
내부통제, 비공식적 통제의 방법, 민중통제(외부통제)의 내재화	외부통제, 공식통제의 방법
사회집단의 인구구성비율 반영	공개경쟁채용시험, 선거를 통한 임용, 실적과 능력 중시
실적주의의 폐단 시정, 실적주의와 충돌 가능 적극적 인사행정, 정치적 임용 가능	엽관주의의 폐단 시정, 실적주의의 강화, 실적주의와 양립 불가 정치적 임용 배제, 정당정치 발전에 기여
집단중심의 사고	개인주의·자유주의의 강화, 국민주권원리, 거버넌스적 시각
충원 후 사회화(재사회화·2차 사회화)를 고려 못함	충원 후 사회화(재사회화·2차 사회화)의 고려

답 ②

관련기출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3 국회9급

- ① 사회를 구성하는 세력집단들의 수적 비율을 관료제 구성에 반영한다.
- ② 관료제의 국민대표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시킨다.
- ③ 대표관료제는 소외집단에 대한 정부정책의 대응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의 집행을 용이하게 해준다.
- ④ 할당제를 구현하므로 실적주의를 구현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 ⑤ 역사별과 사회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답 ④

25 현행 「전자정부법」에 명시된 전자정부의 원칙이 아닌 것은?

- ①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 ②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효율성의 향상
- ③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 ④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강화

해설

전자정부의 원칙(전자정부법 제4조)

- ① 행정기관 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사항을 우선 고려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 ㉡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효율성의 향상
 - ㉢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의 확보
 -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 ㉥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 ② 정보기술 아키텍처 기반 원칙 : 전자정부 구현·운영·발전 추진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야 함.
- ③ 행정기관 확인 원칙 : 행정기관 등은 상호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안 됨.
- ④ 개인정보 보호 원칙 :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됨.

답 ④

관련기출

1. 「전자정부법」에 규정된 전자정부의 원칙으로 행정기관 등이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5 행정사

- ㉠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 ㉡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효율성의 향상
- ㉢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의 확보
-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2. 전자정부법에 규정된 전자정부 원칙이 아닌 것은?

2014 지방7급

- ①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②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 ③ 중복투자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 ④ 행정기관 및 국가공무원의 통제 효율성 확대

3. 「전자정부법」에 명시된 전자정부 구현 및 운영 원칙이 아닌 것은?

2007 국가7급

- ①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 ②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효율성의 향상
- ③ 기술개발 및 운영 공개
- ④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 ⑤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의 원칙

4. 전자정부법 상 전자정부 원칙이 아닌 것은?

2009 서울9급(수정)

- ① 행정정보 공개 및 공동이용의 원칙
- ② 정보기술 아키텍처 기반의 원칙
- ③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 ④ 행정보안 준수의 원칙
- ⑤ 행정업무혁신 및 생산성·효율성 향상의 원칙

5. 현행 「전자정부법」 상 행정기관이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1 국가7급

- ①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행정기관 편의의 증진
- ② 행정업무의 혁신 및 효율성의 향상
- ③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의 확보
- ④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답 1. ⑤ 2. ④ 3. ③ 4. ④ 5. ①(국민편익 증진)